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

1. 추진 배경 및 경과

□ 대통령님 지시 (06.12.27)

o 어떤 **정책의 필요성이 제기**되고, **정책검토가 시작**되어 **정책결정**이 나오고, 그것이 **제도화되고 시행**에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분석

□ 추진 경과

o 대통령비서실 **혁신관리수석실 주관**으로 소요시간을 측정·분석

- 측정 대상·측정 기준시점 등 분석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개혁과제(260개) 일부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 실시 (07. 1월)

-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안의 국회 통과시간 측정(2월)

o 측정·분석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보완 (07. 3월)

- 국무조정실, 법제처 등 관련기관간 협의

- 청와대 내부회의(3.15) 의견 : 분석에 대한 해석상 의미 보완 등

o 대통령님 주재 수석·보좌관 회의시 보고 (4.16)

2. 소요시간 분석대상 및 기준

□ (분석대상) **법률로 제도화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** 분석

o 국가개혁과제 260건 중 **주요정책 134건과** 법제처가 국무회의('07.3.20)시 보고한 **참여정부 입법추진 주요 법률 65건**을 분석

- 또한, '88~'06년말까지 **국회 제출된 정부입법 3,131건** 등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활용하여 통과시간을 계산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o 주요 SOC사업은 금번 분석에서 제외

※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SOC사업의 경우 평균 10.4년 소요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□ (분석기준) 정책의 과정을 크게 「정책형성·정책집행·정책평가」로 구분할 때, 이번 보고는 「**정책의제화 - 정책채택 - 제도화**」되는 **정책형성 단계**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토

< 시간측정 기준일 >

o **정책의제화** : 대통령지시·로드맵과제 선정·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부의 공식의제로 결정한 시점

- 언론·시민단체에서의 문제제기와 같은 공중의제(Public agenda) 상태는 제외

o **정책채택** :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**정부입법안의 형태**로 **국무회의에서 심의·결정**한 시점

o **정책제도화** : 정부입법안의 국회제출 후 **본회의 통과한 시점** 및 법률이 **시행되는 데 필요한 시간**

□ (한계와 제약점) **단순 산술평균** 계산함에 따라 개별정책에서 **시간이 소요된 원인**을 **면밀히 추적·분석**하지 못함

o 또한, 주요정책별로 진행정도가 상이하여 **시간측정 구간별 활용 자료에 차이**가 있음

⇨ 향후, 행정학 등 관련 학계에서의 깊이 있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

3.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결과

주요정책이 '**의제화되어 실행**'되기까지 **평균 35개월** 소요

① 정책의제화 → 정책채택 : 평균 21.8개월

· 정책의제화하여 정책안을 마련하는 데 14.5개월 소요

· 정책안을 정부입법으로 결정하는 데 7.3개월 필요

② 정책채택 → 정책 제도화 : 평균 12.9개월

· 채택된 정부입법의 국회 통과 소요시간 : 7.0개월

· 국회통과 후 법률 시행 : 5.9개월

* **단순개선 등 일상적 정책과제를 포함할 경우 소요시간이 전반적으로 짧아질 수 있음**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1 정책의제화 → 정책채택 : 21.8개월

o 로드맵 과제 등 참여정부 주요 정책이 「**의제화 → 정책안 마련 → 정책 최종채택**」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임

< 정책의제화 → 정책안 마련 >

o 정책의제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**평균 14.5개월** 소요

- 주관부서 지정, 현황·사례분석, 초안 마련, 의견수렴, 방안 확정의 절차에 시간 소요

※ **시간이 많이 소요**된 경우

- **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**하여 충분히 합의하는 데 시간 소요
  · 항만노무체계 개편 합의 46개월,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합의 36개월
-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**다수 부처가 관련**된 경우
  ·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방안 마련 23개월,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방안 마련 26개월
- 업무추진 **주관기관이 중간에 변경**된 경우
  · 민원통합콜센터 구축 방안 수립 35개월 (행자부 → 고충위)

※ 시간이 비교적 짧게 소요된 경우
국가통계인프라 강화 3.8개월,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 4.8개월
국가 R&D체계 개편 5.9개월

< 정책안 마련 → 정부입법으로 정책채택 >

o 입법예고 등 필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**평균 7.3개월** 소요

-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한 경우도 있으나, **관계기관 이견** 등으로 장기 소요된 사례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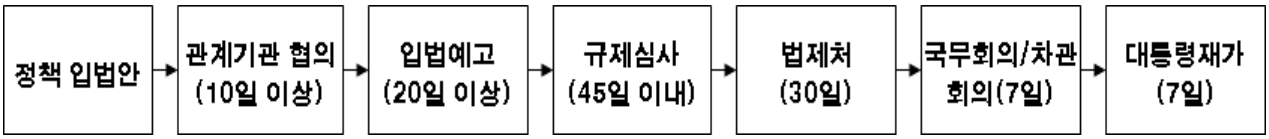
· 사립대학 분쟁조정법안 17개월 : 법안 마련 (04.7) →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의뢰 (05.2) → 행자부 이견, 심사중단 (05.4) → 협의 완료 (05.8) → 법제처 재심사 (05.11) → 국무회의 (05.12)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·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15개월 : 관계부처협의(03.9) → 입법예고(03.10) → 재경부·건교부 등 이견조정 (04.7) → 법제처심사(04.10) → 국무회의(04.11)

※ 시간이 비교적 짧게 소요된 경우 :
국방개혁법안 3.0개월,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1.9개월

< 정부입법으로 채택 절차 >



2 정책의 제도화·시행 : 평균 12.9개월

o 참여정부 **주요정책 입법안**이 국회 제출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**평균 7.0개월** 소요되었음

※ 주요법안 통과 시간
국민연금법 34개월, 비정규직 관련 법안 25개월, 국가재정법 23개월
소비자기본법 20개월, 기초생활보장법 12개월, 국가공무원법 7개월
긴급복지지원법 6개월,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1개월 등

「참조」 참여정부 주요 법안 국회 통과시간

o 법안 **국회통과후 시행까지 5.9개월** 소요

- 주민소환제도 등 **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1년 내외**의 시행 준비기간이 소요

·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1개월,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1년 등

- 반면, 조세관련 법률, 행정서비스 지원, 행정내부 관련 법률 등은 바로 시행되는 편

· 상속세 및 증여세법 0.7개월, 조세특례제한법 0.2개월
긴급복지지원법 3개월, 국방개혁법 3개월, 정부업무평가기본법 0.7개월 등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【 역대 정부법안의 국회 통과 관련 분석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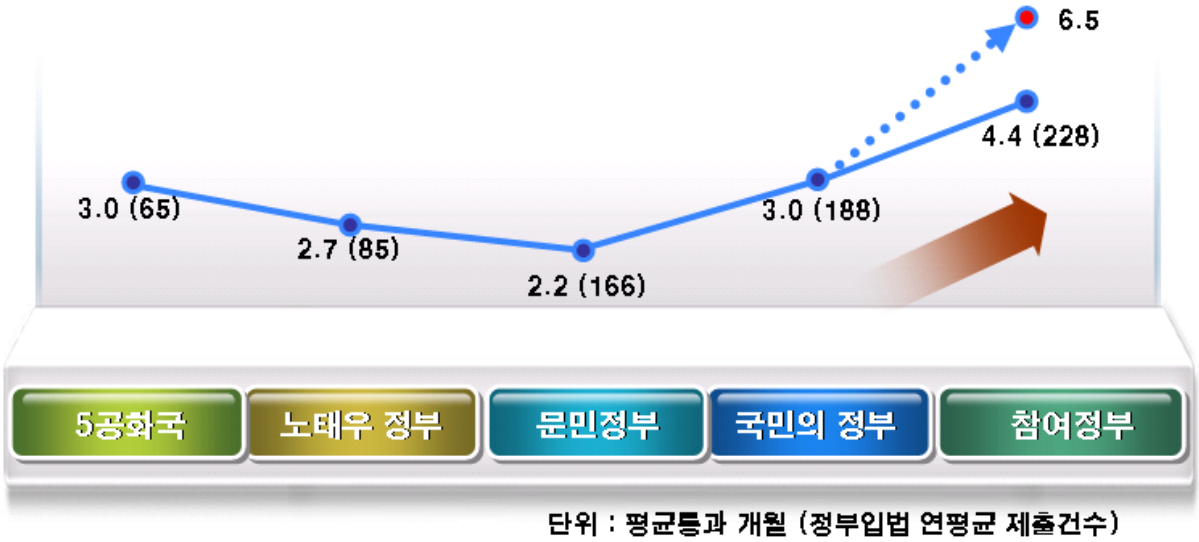
o 국회를 통과한 **모든 정부입법을 기준**으로 할 경우 **참여정부 4.4개월***, 국민의 정부 3.0개월, 문민정부 2.2개월 소요

* '03.2월말~'06.12월말까지 제출된 참여정부 정부입법 (913건) 中 '07.4. 20일 기준으로 국회 통과한 법률(682건)의 통과 소요시간

- 17대 국회 **계류중인 정부법안 205건*** ('07.4.20일 기준)이 금년 6월말까지 모두 통과된다고 **가정할 경우**, 정부입법안의 국회통과시간은 **6.5개월로 증가** 예상

* 미통과된 법안의 평균 계류시간 : 12.6개월 ('07. 4. 20일 현재)

< 역대 정부별 정부입법 평균 통과시간 >



o 국회 통과시간은 **여소야대 등 국회 구성, 국회의원 임기, 발의된 법안수**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

< 국회 구성 >

- **여소야대 : 평균 4.1개월, 여대야소 : 평균 2.6개월** 소요

· **3당 합당**(90.1)으로 **여대야소 전환**후 국회 통과시간이 짧아짐

※ 2.8개월('88) → 3.5('89) → 2.0('90) → 1.2('91)

· **자민련간의 공조파기**('01.9~)후 **여소야대기간 통과시간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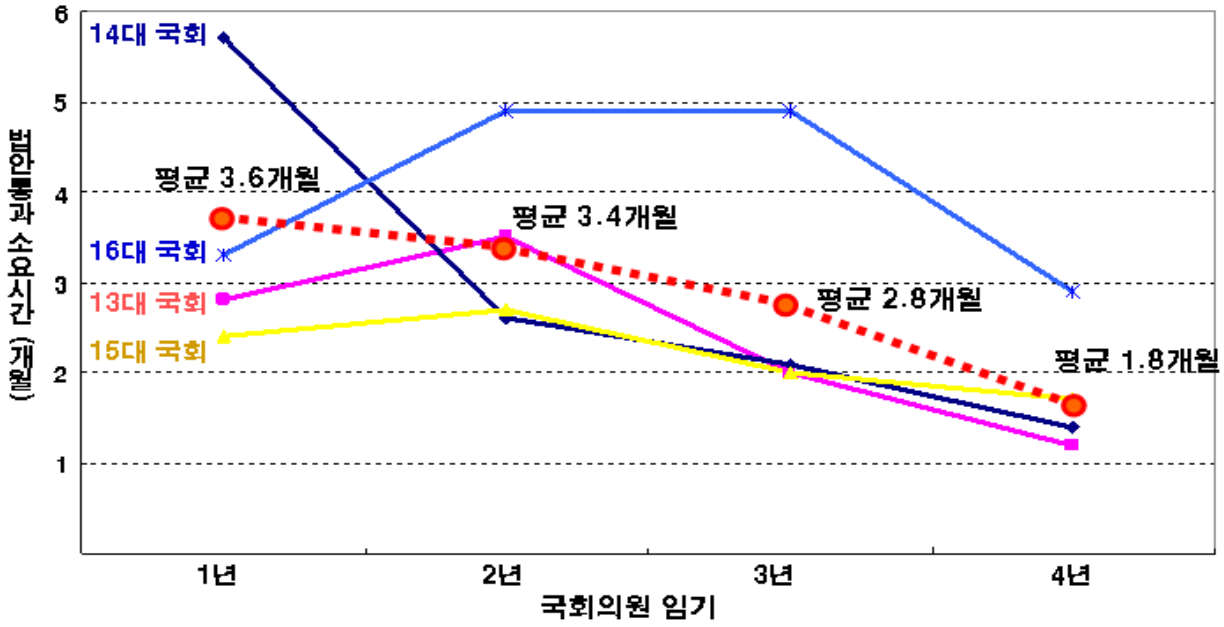
※ 2.0개월('98) → 1.7('99) → 3.3('00) → 4.9('01) → 4.9('02)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< 국회의원 임기 >

- **국회의원 임기후반기에 통과시간**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
  - · 평균통과시간 : 3.6개월 (1년) →1.8개월 (4년)
  - · 평균통과율 : 96.4% (1년) → 89.8% (4년)

< 국회의원 임기별 정부입법안 통과소요시간 >



< 발의 법안수 >

- 지난 20년간 정부입법뿐만 아니라 **의원입법안도 급격히 증가** 되었으며, 법안의 통과소요 시간도 증가 추세

- 의원입법 · 정부입법의 역대 국회별 통과소요시간 -

구 분		13대 국회 (88.5~92.5)	14대 국회 (92.5~96.5)	15대 국회 (96.5~00.5)	16대 국회 (00.5~04.5)	17대 국회 (04.5~07.4.20)
총 법안건		**938**	**902**	**1,951**	**2,507**	**5,742**
의원입법	접수건	570	321	1,144	1,912	4,936
	처리건	352	167	687	1,030	1,809
	처리소요 시간(월)	**4.0**	**3.4**	**5.5**	**7.8**	**7.4**
정부입법	접수건	**368**	**581**	**807**	**595**	**806**
	처리건	355	561	737	551	570
	처리소요 시간(월)	**2.3**	**2.4**	**2.1**	**3.9**	**4.7**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- 참조 : 연도별·정부별 정부입법 건수 및 통과시간 -

연도	88	89	90	91	92	93	94	95	96	97	98	99	00	01	02	03	04	05	06
구분	**노태우 정부**					**문민정부**					**국민의 정부**					**참여정부**			
	13대 국회 (88.5~92.5)				14대 국회 (92.5~96.5)				15대 국회 (96.5~00.5)				16대 국회 (00.5~04.5)				17대 국회 (04.5~06.12)		
	여소야대 (민정당 42%)		**여대야소** (3당 합당)		**여대야소** (민자당 49.8%→의원영입)				**여대야소** (신한국 46% →의원영입)		**여 소 야 대** (국민회의 26%) →**여대야소** (DJP공조, 98.9)		**여대야소** (DJP공동 48%, 의원영입) → **여소야대** (DJP공조 파기 01.9)				**여대야소** (우리당 50.8%) → **여소야대** (05.4 보궐선거 등)		
정부입법(건)	65	89	103	111	54	189	173	165	168	138	299	202	199	138	109	139	207	242	325
통과율(%)	92.3	98.9	98.1	95.5	98.1	97.4	96.5	95.2	97.0	96.4	92.0	82.7	98.0	91.9	94.5	85.8	93.7	81.8	52.6
통과시간(월)	2.8	3.5	2.0	1.2	5.7	2.6	2.1	1.4	2.4	2.7	2.0	1.7	3.3	**4.9**	**4.9**	2.9	**4.5**	**5.2**	**4.5**

* **92년 5.7개월** : 지방자치법(21개월),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(36개월) 등 17개월 이상 소요된 7개 법안을 제외할 경우 평균소요시간은 2.0개월

** **06년 통과율 52.6%** ('07.4.20일 기준) : 제출한 그 해는 물론 다음 해에 통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, 향후 상당수가 통과되어 통과율은 80%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

*** **03년 통과소요시간 2.9개월 :** 16대 국회 마지막해인 03년의 경우,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정부입법의 국회 통과에 2.9개월 소요

**** 정부예산안 통과시간도 증가되는 추세,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평균 44일에 불과
노태우 정부 평균 66일 → 문민정부 61일 → 국민의 정부 71일 → 참여정부 89일

※ **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특징** (07.3.20, 법제처)

o 과거 정부에서는 해가 갈수록 국회제출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**참여정부에서는 매년 증가**

-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중·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과 공약 등 이행을 위한 계획적 입법추진
- 국회의 입법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의원입법 발의 건수 및 통과건수가 증가 (입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와 대비)

o **입법환경 대응 시스템 마련과 법령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**

-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한 법제처 '법제지원단' 설치 (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)
- 재량행위 투명화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등

4. 시사점

□ 의사결정의 지체 등 **변화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비동시화**가 **지속적인 부의 창출을 저해** : 앨빈 토플러 「부의 미래」에서 지적

o 「관료주의, 근시안적인 입법, 규제에 의한 지체, 미봉적인 점진주의」로는 **변화 가속화에 대응**하기 곤란

* '부의 미래'에서 지적한 미국 사회집단간의 속도 차이 :
기업(100마일) → 가족 (60) → 정부 (25) → 학교 (10) → 정치조직 (3) 등

□ (정책 주체) 사회변화에 대응하고,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**정책 주체별로 책임 있는 속도관리**가 필요

o (정부) 미래 중대한 문제를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**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책임있게 준비**하는 장기적·근본적인 **문제해결 필요**

①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 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, ②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·분석, ③ 담당조직 정비 및 예산 확보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문제탐색과 의제화 필요

o (언론·정치구조 등) 정책대안과 이슈를 **공론의 장에서 함께 논의**하고 **사회적 합의**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

- **객관적인 사실**에 근거하여 **합리적인 논리로 토**론하고, **원칙있는 문제제기**와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

-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발전될 수 있도록 **정치적 의사결정의 질적 변화**를 모색할 필요

□ (프로세스) 정책아젠다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**정책제도화 프로세스**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필요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o 예컨대,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의 동시진행, 입법절차 원스톱 처리 등 **행정부 내부의 입법프로세스를 재설계** 필요

※ 법령입안부터 공포까지의 입법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기 위한 「정부입법 정보체계 구축」사업 추진중 (법제처)

□ (정책 학습) 참여정부가 혁신적으로 마련한 **정책관련 업무매뉴얼을 계속적으로 학습·발전**시켜 업무수행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정책품질을 향상

o 소관 부처별로 해당 매뉴얼을 보완·발전시키는 지속적 혁신 노력이 필요

o 그간 구축된 시스템 혁신을 활용하여 **평균 속도관리에서 편차 속도관리**로 행정서비스 **품질을 제고**하고, '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' 등을 통한 지속적 업무효율화를 추구할 필요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「참조」

총사업비 1조원 이상 SOC사업 현황 (06년말 기준)

구분	주요내용	소요기간 (년)	총사업비 (억원)	비고
경부고속철도 2단계	167.2km	8년('02～'10)	72,169	1단계: '92～'04
호남고속철도건설	230.9km	11년('06～'17)	105,417	
경춘선복선전철	63.8km	10년('99～'09)	19,654	
덕소-원주 복선전철	90.4km	15년('93～'08)	16,556	
보성-임성리 철도건설	79.5km	9년('02～'11)	12,979	
삼랑진-진주 복선전철	101.4km	9년('02～'11)	19,329	
장항선개량 사업	75.6km	11년('97～'08)	14,658	
부산-울산 복선전철	72.1km	17년('93～'10)	21,093	
수원-인천 복선전철	52.8km	13년('95～'08)	12,499	
오리-수원 복선전철	18.2km	8년('00～'08)	15,017	
용산-문산 복선전철	48.6km	12년('96～'08)	18,268	
광주 지하철 1호선	20.0km	11년('96～'07)	16,164	
부산지하철3호선 2단계	12.7km	12년('96～'08)	10,492	
서울지하철7호선 연장	10.2km	8년('03～'11)	10,841	
서울지하철9호선	25.5km	7년('01～'08)	33,644	
인천국제공항 2단계	활주로 4,000×60m 등	6년('02～'08)	39,449	1단계 : '92～'01
새만금지구 방조제 축조	방조제 33.0km 등	17년('91～'08)	24,435	
부산신항 1단계 개발	방파제 1.49km 등	16년('95～'11)	20,667	
울산신항 개발	방파제 5.2㎞ 등	16년('95～'11)	12,972	
대구-포항 고속도로	68.4km	11년('97～'08)	19,472	
대전-당진 고속도로	94.3km	8년('01～'09)	15,353	
익산-장수 고속도로	61.0km	6년('01～'07)	12,221	
전주-광양 고속도로	118.0km	7년('03～'10)	19,021	
주문진-속초 고속도로	51.0km	6년('03～'09)	10,291	
청원-상주 고속도로	80.5km	6년('01～'07)	13,228	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「참조」

신도시 건설 소요시간

※ 세종(행정중심복합도시, 2205만평, 50만명) : 계획발표(04.8월)-최초입주('10.하반기)

구 분	주요내용	계획발표	최초입주	사업준공	소요시간 (개월)	
					계획~최초입주	계획~사업준공
산본신도시	127.1만평, 42.0천호	1988-9-15	1992-4-30	1995-1-31	43.5	76.5
중동신도시	165.0만평, 41.4천호	1988-9-15	1993-2-28	1996-1-31	53.4	88.5
평촌신도시	154.5만평, 42.0천호	1988-9-15	1992-3-30	1995-12-31	42.5	87.5
분당신도시	594.1만평, 97.6천호	1989-4-27	1991-9-30	1996-12-31	29.1	92.1
일산신도시	476.0만평, 69.0천호	1989-4-27	1992-8-31	1995-12-31	40.1	80.1
파주신도시	500.8만평, 80천호	1998-12-29	2009-6-30	2013-12-31	126.0	180.1
동탄신도시	273.3만평, 40천호	2000-6-27	2007-1-31	2007-12-31	79.1	90.1
판교신도시	281.2만평, 29천호	2001-9-28	2008-12-31	2009-12-31	87.1	99.1
광교신도시	341.2만평, 31천호	2003-12-30	2010-9-1	2011-12-31	80.0	96.0
옥정신도시	193.4만평, 33천호	2004-7-12	2010-6-30	2011-12-31	71.6	89.6
김포신도시	354.4만평, 59천호	2005-10-13	2010-12-1	2012-12-31	61.6	86.6
회천신도시	133.6만평, 24천호	2005-11-23	2010-12-31	2013-12-31	61.3	97.3
평택신도시	528.2만평, 63천호	2005-12-23	2011-6-30	2013-12-31	66.2	96.3
송파신도시	204.7만평, 49천호	2005-12-27	2011-12-31	2013-12-31	72.1	96.1
검단신도시	340.0만평, 66천호	2006-10-27	2011-12-1	2015-12-31	61.1	110.1
평균					**65.0 개월**	**97.7 개월**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「참조」

참여정부 주요 법안 국회 통과시간

※ 주요법안 선정 기준 : 법제처 '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특징과 성과'(07.3.20, 국무회의)

구분	법명	제출일 (A)	국회 통과일(B)	시행일 (C)	소요시간(월)		
					A~B	B~C	A~C
로드맵 과제에 따른 계획적 입법	국가균형발전특별법	03-10-21	03-12-29	04-4-1	2.3	3.1	5.3
	지방분권특별법	03-10-21	03-12-29	04-1-16	2.3	0.6	2.8
	주민투표법	03-10-21	03-12-29	04-7-29	2.3	7.0	7.1
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	01-11-22	03-12-23	04-7-29	25.0	7.2	32.2
	전자적 민원처리 관련법	03-9-24	04-3-2	04-3-22	5.3	0.7	5.9
	지방자치법	04-10-18	04-12-29	05-1-27	2.4	0.9	3.3
	정부조직법	05-10-21	05-12-8	06-7-1	1.6	6.8	8.3
	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	05-2-5	05-6-29	05-10-30	4.8	4.0	8.8
	지방재정법	04-12-1	05-6-29	06-1-1	6.9	6.1	13.0
	국가공무원법	05-5-18	05-12-8	06-7-1	6.7	6.8	13.4
	정부업무평가기본법	05-5-6	06-3-2	06-3-24	9.9	0.7	10.6
	국가재정법	04-10-19	06-9-8	07-1-1	22.6	3.8	26.4
	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	06-1-23	06-9-8	07-4-5	7.5	6.9	14.4
	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	06-6-20	06-12-8	07-7-4	5.6	6.9	12.5
장기적 효과를 고려한 선도적 입법	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	03-10-31	03-12-18	05-1-1	1.6	12.4	14.0
	증권관련집단소송법	01-12-27	04-1-20	05-1-1	24.8	11.4	36.1
	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	03-10-14	03-12-29	05-1-1	2.5	12.1	14.6
	국어기본법	04-6-3	04-12-29	05-7-28	6.9	7.0	13.8
	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	04-9-22	04-12-29	05-7-28	3.2	7.0	10.2
	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	04-12-24	05-3-2	05-3-31	2.3	1.0	3.2
	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	04-9-4	05-4-26	05-9-1	7.7	4.2	11.9
	공직자윤리법	04-9-22	05-4-26	05-11-19	7.1	6.8	13.9
	우주개발진흥법	04-12-29	05-5-3	05-12-1	4.1	6.9	11.1
	발명진흥법	05-10-11	06-2-9	06-9-4	3.9	6.8	10.8

구분	법명	제출일 (A)	국회 통과일(B)	시행일 (C)	소요시간(월)		
					A~B	B~C	A~C
	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	05-5-26	06-3-2	06-9-25	9.2	6.8	16.0
	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	05-5-18	06-3-2	07-3-25	9.5	12.8	22.2
	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	06-7-24	06-11-30	07-3-27	4.2	3.9	8.1
	국방개혁에 관한 법률	05-12-2	06-12-1	07-3-29	12.0	3.9	15.9
	고령친화산업 진흥법	05-11-8	06-11-30	07-6-29	12.7	7.0	19.7
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노력	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	03-11-22	04-3-2	04-9-23	3.3	6.7	10.0
	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	02-10-23	03-6-30	04-1-1	8.2	6.0	14.3
	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	03-7-16	03-8-29	04-1-1	1.4	4.1	5.5
	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	03-2-20	03-8-29	04-1-5	6.3	4.2	10.5
	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	03-6-19	03-11-21	04-1-1	5.1	1.3	6.4
	증권거래법	03-6-19	03-12-18	04-4-1	6.0	3.4	9.4
	산업발전법	03-10-28	03-12-22	04-5-21	1.8	5.0	6.8
	토지이용규제기본법	05-6-4	05-11-16	06-6-8	5.4	6.7	12.1
	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	05-9-12	05-12-8	06-3-30	2.9	3.7	6.6
	전자금융거래법	05-1-11	06-4-6	07-1-1	14.8	8.8	23.7
	소비자기본법	05-1-6	06-8-29	07-3-28	19.8	7.0	26.7
취약 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	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	02-11-13	03-7-31	04-8-16	8.6	12.5	21.1
	상속세 및 증여세법	03-9-30	03-12-9	04-1-1	2.3	0.7	3.0
	유아교육법	03-4-1	04-1-8	05-1-23	9.2	12.5	21.7
	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	03-9-5	04-2-16	04-6-6	5.4	3.7	9.0
	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	03-7-23	04-3-2	04-4-1	7.3	1.0	8.3
	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	02-9-11	04-3-2	04-9-23	17.7	6.7	24.4
	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	04-11-9	04-12-29	06-1-28	1.7	13.0	14.6
	정부조직법	05-2-3	05-3-2	05-3-24	1.0	0.7	1.7
	민법	03-11-6	05-3-2	05-3-31	15.9	1.0	16.8
	긴급복지지원법	05-6-9	05-12-1	06-3-24	5.7	3.8	9.5
	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	05-10-6	05-12-8	06-1-1	2.1	0.8	2.8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구분	법명	제출일 (A)	국회 통과일(B)	시행일 (C)	소요시간(월)		
					A~B	B~C	A~C
	비정규직 보호 3법	04-11-8	06-11-30	07-1-1	24.7	1.0	25.8
	국민기초생활 보장법	05-11-30	06-11-30	07-7-1	12.0	7.0	19.0
	조세특례제한법	06-9-29	06-12-26	07-1-1	2.9	0.2	3.1
국민참여와 설득 협의 노력을 기울인 입법	문화예술진흥법	03-11-17	04-12-29	05-7-28	13.4	7.0	20.4
	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	04-6-23	04-12-9	05-4-1	5.5	3.7	9.3
	해양환경관리법	06-5-3	06-12-22	08-1-30	7.6	13.3	20.9
	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	04-11-3	04-12-8	05-7-1	1.2	6.8	7.9
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	05-1-11	05-6-30	06-8-5	5.6	13.2	18.8
	중·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	05-1-28	05-3-2	06-8-5	1.1	17.1	18.2
	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	04-12-24	05-3-2	05-3-31	2.3	1.0	3.2
	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	05-9-9	05-12-1	06-3-24	2.7	3.8	6.5
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	04-11-8	04-12-29	05-12-1	1.7	11.1	12.8
평균					**7.0**	**5.9**	**12.9**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「참조」

의원입법·정부입법의 역대 국회별 통과소요시간

구 분		13대 국회 (88.5～92.5)	14대 국회 (92.5～96.5)	15대 국회 (96.5～00.5)	16대 국회 (00.5～04.5)	17대 국회 (04.5～07.4.12)
정당별 의석 (선거당시)		민주정의당 125 평화민주당 70 통일민주당 59 기타 45 ※ 3당 합당 (90.1)	민주자유당 149 민주당 97 통일국민당 31 기타 22	신한국당 139 국민회의 79 자민연 50 기타 31 ※DJP공조 98.9	한나라당 133 국민회의 115 자민연 17 기타 8 ※DJP파기 01.9	열린우리당 152 한나라당 121 민주당 9 기타 17
총법안수 (의원+정부)		938	902	1,951	2,507	5,742
의원입법	접수	570	321	1,144	1,912	4,936
	가결	171	119	461	516	847
	통과소요 시간(월)	4.0	3.4	5.5	7.8	7.4
	부결	-	-	-	4	4
	폐기	48	16	72	124	219
	임기만료 폐기	123	125	353	713	-
	대안폐기	181	48	226	514	962
	철회	47	13	32	41	68
	계류	-	-	-	-	2,836
정부입법	접수	368	581	807	595	806
	가결	321	537	659	431	369
	통과소요 시간(월)	2.3	2.4	2.1	3.9	4.7
	부결	-	-	-	1	-
	폐기	2	1	18	2	2
	임기만료 폐기	9	14	37	41	-
	대안폐기	34	24	78	120	201
	철회	2	5	15	-	1
	계류	-	-	-	-	233

* 폐기 : 소관 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
** 임기만료폐기 :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법안이 폐기된 경우
*** 대안폐기 : 원안의 취지는 살리되 내용을 변경한 대안을 상정하는 경우
**** 처리(본문, 6쪽) : 가결건수 및 대안폐기 건수의 합

('07.4.24,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, 혁신관리비서관실)

「참조」

정부예산안 국회통과 시간

구 분 (평균)		제출일	의결일	소요시간(일)
노태우 정부 (66일)	89년 예산안	1988-09-30	1988-12-02	62
	90년 예산안	1989-09-29	1989-12-19	80
	91년 예산안	1990-09-28	1990-12-18	80
	92년 예산안	1991-10-02	1991-12-03	61
	93년 예산안	1992-10-02	1992-11-20	48
문민 정부 (61일)	94년 예산안	1993-09-28	1993-12-07	69
	95년 예산안	1994-10-01	1994-12-02	61
	96년 예산안	1995-10-02	1995-12-02	60
	97년 예산안	1996-10-02	1996-12-13	71
	98년 예산안	1997-10-01	1997-11-18	47
국민의 정부 (71일)	99년 예산안	1998-10-02	1998-12-09	67
	00년 예산안	1999-10-01	1999-12-18	77
	01년 예산안	2000-10-02	2000-12-27	85
	02년 예산안	2001-09-28	2001-12-27	89
	03년 예산안	2002-10-01	2002-11-08	37
참여 정부 (89일)	04년 예산안	2003-09-30	2003-12-30	90
	05년 예산안	2004-10-02	2004-12-31	89
	06년 예산안	2005-09-30	2005-12-30	90
	07년 예산안	2006-09-29	2006-12-27	88